

광주글로벌모터스 잇단 산재 사망사고 이유 있었다

3단계까지 간 하청...결국 '안전 백년하청'

재하청 노동자 안전 위협 속 원청업체에 고가 수주가 혜택 의혹도 낮은 수주기에 안전 투자 소홀...다단계 하도급 고리가 만든 '人災'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취지 무색...노동계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작업중 떨어져 숨진 노동자 (광주일보 1월 25일 6면) 는 다단계 하청 고리의 맨 아래 위치하는 '을(乙) 중의 을'이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내걸었던 '노사상생형 일자리' 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안전설비·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부족하고 공기 단축 압박까지 받게되면 안전관리·감독도 소홀할 우려가 커진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이 때문에 원청 책임 강화가 최우선 대책으로 꼽히는데도, 국회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을 늦추면서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하청이 3단계까지 진행된 점을 들어 원청업체에 대한 고가 수주가 배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민주노총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GGM 공장에서 천장 '덕트'(공기가 흐르는 통로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GGM과 계약을 체결한 원청 중견기업인 A업체는 B업체에 하청을 줬고 C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받아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C업체는 A씨 같은 일당 노동자를 채용해 수주한 공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 측 분석이다.

원청대기업의 하청과 재하청을 받는 업체들의 경우 낮은 수주기와 영세성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빠듯하다보니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안전 설비에 투자할 능력을 갖춘 업체가 드문 실정이다.

이같은 점을 들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단계 하청 시스템 속에 놓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광주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하청 업체가 또다른 업체에 공사 전체를 맡기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금액의 일부만만 챙기는 방식으로 하도급의 꼬리가 길어질 수록 공사금액은 줄 수 밖에 없다"며 "최종 하도급 업체는 낮은 수주기에 맞춰 공사를 해 이윤을 남겨야 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내걸었



2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들이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던 GGM이 산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뿐인 '노사 상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GGM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망사고와 관련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전국공공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노동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단계 하청도급 문제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죽지

않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공동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상생형 일자리를 조성한다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죽음의 공장이 돼버렸다"면서 "광주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이와관련, "숨진 노동자가 2차 하도급 업체 소속인 것은 맞지만, 재하도급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역(광주) 기업에게 기회를 주려한 재하도급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행 사고 낸 버스운전사 실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11살 아동을 들이받은 50대 버스운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는 점을 들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어들이던 소득으로 추가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광주시 광산구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아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시속 30km로 제한된 지점을 10km 이상 초과한데다, 정지신호까지 위반하고 진행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특가법,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와 정지신호 등을 위반해 사고를 낸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해자측이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며 A씨를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할머니조차 나서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 사정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조합원들에 선물세트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농협 조합장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주배원예 B전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월 말부터 2월 초, 설 명절을 계기로 B 전무와 공동으로 조합원 43명

에게 굴비 세트(2명), 사과 1상자(41명)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25표 차이로 당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설 선물을 의례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 등의 항소 이유와 관련,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이 42명을 추가로 선물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사과상자를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나주배원예이 '2019년 설 명절 선물 지급 계획'에 따라 각 각, 지점 등에서 보낸 공문을 토대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것과 달리, 추가로 42명을 선정한 데 대해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공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선정 경위는 이례적이고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B씨 주장도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온기 전하러 갑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 봉사자들이 25일 오전 일곡동의 한 취약계층 세대에 연탄배달 봉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동구 대인동, 싹 땅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

문의. 010-3605-5000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로얄(34)방3		4,890	3,4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